

“고용노동부, ‘초광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부울경·대경·충청 연계 사업 승인

-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등 3개 초광역 사업 확정, 212억원 지원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인재 유출 방지 및 정주 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권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역이음프로젝트”의 공모·심사 결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개 권역의 연합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광역이음프로젝트”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행정·지리적 제약으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권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다년간(4년간) 지원함으로써 권역 외 인구 유출 방지 및 수도권 등에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5년 10월부터 지방노동관서·지자체·지역인자위로 ‘권역별 초광역 사업 준비단’을 구성하고 워크숍과 “광역이음프로젝트” 선정 심사위원의 집중 컨설팅을 거쳐 각 권역별 일자리 사업 내용·규모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역별 사업은 각 지역의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부산·울산·경남 (100억 원)은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주력 산업 중심의 ‘출퇴근-취업 연계 초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대구·경북 (80억 원)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전후방 협업기업 공동 R&D와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경이음 미래모빌리티 일자리-

생활권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충청권 (32억 원)은 성장산업(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인재 유입·정착·성장 선순환을 위한 '초광역 경력이음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한다.

각 권역별 사업에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자산 형성 및 생계비 지원, 장기근속 및 재취업 지원, 기업탐방·현장실습 패키지 지원 등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노동청장이 간사로 참여하여 민관 협업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권역별 이행결의대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광역이음프로젝트는 행정·지리적 한계를 넘어 지역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와 초광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송은정 (044-202-7410)
			주무관	원승연 (044-202-7411)
			주무관	정준수 (044-202-7409)

